

스타트업을 위한 IP 정책 제언

조원희 (법무법인 D'Light 변호사)

대형 법인에서 16년을 근무하다 스타트업이나 벤치기업을 지원해 보겠다고 새로운 법인을 시작한 지 이제 4개월이 되어 간다. 대형 법인에 있는 동안에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만날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법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여 개인적으로 조금씩 돕다가 아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4개월 간 법률자문을 위해서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곧 상장을 앞둔 스타트업부터 데스크벨리를 지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견 스타트업,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까지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났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핀테크 등등 아이템도 다양하다. 기술력에 자신 있는 스타트업들은 대개 해외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스타트업의 본 고장인 실리콘밸리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곳부터 시장이 큰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곳까지 다양했다. 이들의 IP(지적재산권)는 어떨까. 먼저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었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인데도 특허는 나중에 제품 출시하고 나서 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의 기술 스타트업이 엔지니어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특허나 IP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날 때마다 투자나 제품/서비스 개발 못지않게 IP도 챙겨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했다. 둘째는 특허의 품질이 대부분 좋지 않았다. 2페이지가 넘는 청구항 1항을 보면서 아연실색하기도 했다. 특허를 왜 냈는지 의아할 때도 있다. 스타트업들의 특허 출원은 정부지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도 하고 스타트업 전문이라는 변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부분 일반 출원보다 수가가 낮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낮은 수가로 높은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야 어떻게 기술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 싶다. 이런 경우 대개는 다시 상담을 하고 해당 분야 전문 변리사를 연결하여 다시 출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BM 특허가 많았다. 첫 번째 경우와는 정 반대의 상황인데, 굳이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무리하게 아이디어를 짜내 여러 건의 BM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다. 물론 그 중 상당수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서비스 방식이 변경되면서 이미 출원한 특허가 달라진 서비스와 무관해지고 그렇다고 경쟁자를 배제할 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다. 그저 정부과제의 요건을 맞추고 기술금융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특허가 많았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위한 IP 정책에는 '선택과 집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스타트업 중 정말 특허가 중요한 곳이 있다면, 1~200만 원의 국내 특허 한두 건 출원할 수 있는 지원만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R&D에도 관여하고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 컨설팅도 하고 해외 출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엑셀러레이터로서 지분 참여하면서 투자금을 IP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IP와 관련한 토털 서비스를 하면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해외 시장으로 가려면 그에 걸맞은 IP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의 IP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한다면 이를 통해서 기술 스타트업이 해외도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IP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또한 스타트업이 자유로이 가져다 쓸 수 있는 IP pool 또는 기술 pool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스타트업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부족한 자금 때문에 충분한 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이 보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개발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결국 좌절하게 된다. 그리고 애초부터 스타트업이 뛰어들 수 없는 기술 분야도 많다. 어느 기업이 구글이나 IBM과 경쟁해 AI 산업에서 앞설 수 있을까. 그저 무늬만 AI인 스타트업만 양산할 뿐이다.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영역의 기술이나 IP를 과감하게 공개하여 스타트업들이 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 데이터도 문호를 개방하여 스타트업들이 자유로이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후방 산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어느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협정 위반의 문제도 없다.

향후 국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은 강소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가 조금씩 재편되어 간다면 결국은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계속하여 설립되고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경제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 R&D의 큰 그림에 스타트업 지원이 하나의 어젠다로 들어가야 한다. 스타트업 육성에는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な 성장과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 IP 중심의 스타트업 정책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분야별 맞춤형으로 가야할 때가 아닐까 싶다.